

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

동향분석팀*

*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· 통계센터 소장
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· 통계센터 연구원

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

《요 약》

-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
 -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,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- 본 고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가 1)거시 경제, 2)교육, 3)노인 의료 및 주거, 4)국가 재정과 연금 부문 및 5)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문별 이슈를 정리하고,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
- 본 고에서 도출한 부문별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
 -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특히,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
 -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·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 증대 필요
 -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확대 및 평생학습기관의 직업재교육 기능 강화
 - 여성의 출산 장려, 경제활동 제고 및 가정 내 부양 서비스를 위해 가족 구성원 간/가족과 사회 간 역할 재분담 필요
 - 저부담-고급여 구조의 연금 재구조화
 - 새로운 인력 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

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

I. 문제 제기

■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

-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
 - 2000년에 고령화 사회(고령인구 비율 7%)로 진입한 이후 2026년에 초고령 사회(고령인구 비율 20%)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.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
 - 미국,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

〈표 1〉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

| 국 가 | 도달년도 | | | 증가 소요연수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고령화(7%) | 고령(14%) | 초고령(20%) | 7%→14% | 14%→20% |
| 한 국 | 2000 | 2018 | 2026 | 18 | 8 |
| 일 본 | 1970 | 1994 | 2006 | 24 | 12 |
| 프랑스 | 1864 | 1979 | 2018 | 115 | 39 |
| 이태리 | 1927 | 1988 | 2006 | 61 | 18 |
| 미 국 | 1942 | 2015 | 2036 | 73 | 21 |
| 스웨덴 | 1887 | 1972 | 2014 | 85 | 42 |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2006

-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,875천 명으로,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.0%이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
 - 총인구는 '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. 총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진전이 예상
 - * 인구성장률: 0.84%('00) → 0.26%('10) → 0.00%('19)
 -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'18년에는 14.3%, '30년에는 24.3%에 이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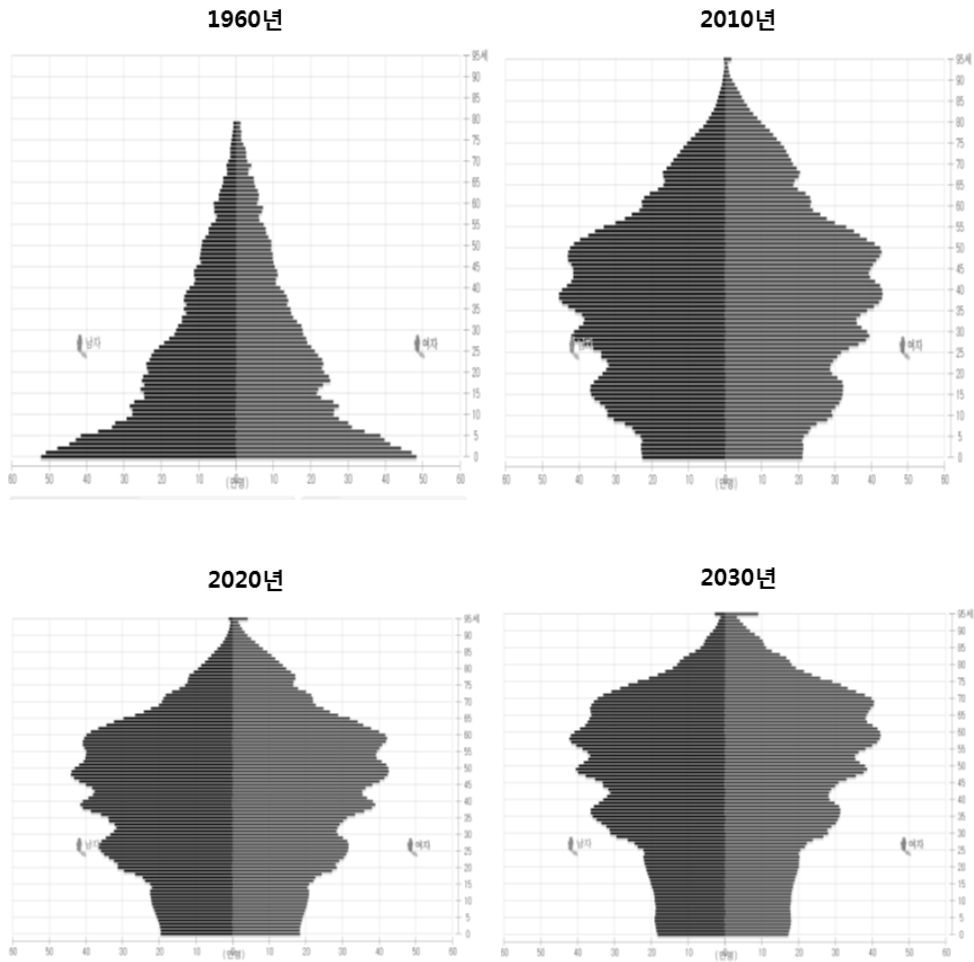
〈표 2〉 연령 계층별 인구

(단위: 천 명, %)

| | 1990 | 2000 | 2005 | 2010 | 2018 | 2026 | 2030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총인구 | 42,869 | 47,008 | 48,138 | 48,875 | 49,340 | 49,039 | 48,635 |
| 0~14세 | 10,974 | 9,911 | 9,241 | 7,907 | 6,286 | 5,721 | 5,525 |
| 15~64세 | 29,701 | 33,702 | 34,530 | 35,611 | 35,979 | 33,099 | 31,299 |
| 65세이상 | 2,195 | 3,395 | 4,367 | 5,357 | 7,075 | 10,218 | 11,811 |
| 구성비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| 0~14세 | 25.6 | 21.1 | 19.2 | 16.2 | 12.7 | 11.7 | 11.4 |
| 15~64세 | 69.3 | 71.7 | 71.7 | 72.9 | 72.9 | 67.5 | 64.4 |
| 65세이상 | 5.1 | 7.2 | 9.1 | 11.0 | 14.3 | 20.8 | 24.3 |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2006

- 인구구조 변동: 피라미드 형태('60) ➡ 항아리 형태('10) ➡ 중심이 높아진 항아리 형태('30)
 - 베이비붐 당시(1960년도)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형태
 - 2010년도에는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100만 명 이상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40~50대 중년층을 형성하면서 항아리 형태를 보임
 - '20년도와 '30년도에도 기본적으로 항아리 형태를 유지하지만 60대가 인구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허리가 약간 높아진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 됨. 노인인구 내의 고령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, 25세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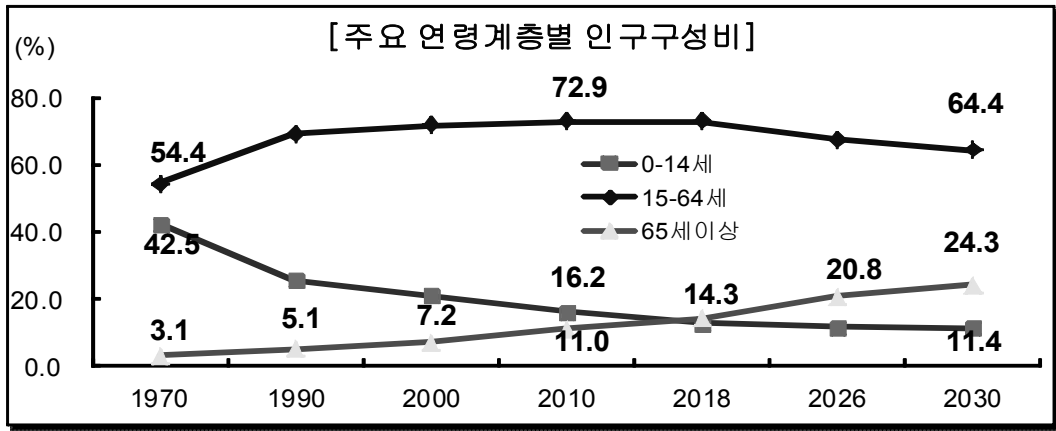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전국 인구 추계 피라미드」

[그림 1] 인구 피라미드

▣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의 감소

- 생산가능인구는 '16년을 정점(3,619만 명)으로 감소할 전망
-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생산가능인구(25~49세)는 '07년을 정점(2,066만 명)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



출처: 통계청, 「2011 고령자통계」

[그림 2] 인구구조 변동 추이(1970~2030)

- 2010년의 경우,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15.0으로, 이는 생산가능인구 6.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
 -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'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, '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
- 2010년 노령화 지수는 67.7로, 유소년 인구(0~14세)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임
 - '16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0.7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

〈표 3〉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

(단위: 해당인구 백 명당 명, 명)

| | 1990 | 2000 | 2010 | 2016 | 2019 | 2020 | 2030 | 204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노년부양비 ¹⁾ | 7.4 | 10.1 | 15.0 | 18.2 | 20.6 | 21.7 | 37.7 | 56.7 |
| 노령화지수 ²⁾ | 20.0 | 34.3 | 67.7 | 100.7 | 119.0 | 125.9 | 213.8 | 314.8 |
|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(명) ³⁾ | 13.5 | 9.9 | 6.6 | 5.5 | 4.9 | 4.6 | 2.7 | 1.8 |

주: 1) 노년부양비 = (65세 이상 인구 / 15~64세 인구) × 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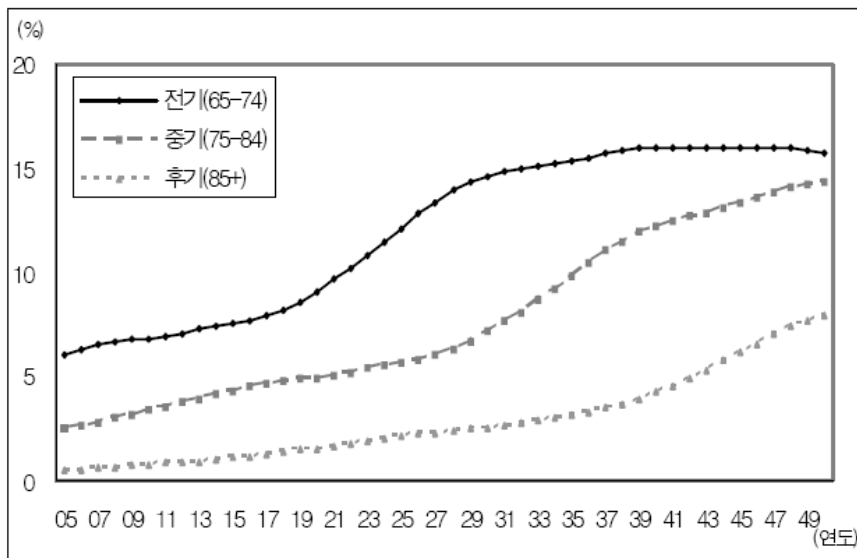
2) 노령화지수 = (65세 이상 인구 / 0~14세 인구) × 100

3)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= 15~64세 인구 / 65세 이상 인구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2006

■ 노인 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

- 고령화 진전 이전의 노인 인구는 전기고령층(65~74세), 중기고령층(75~84세), 후기고령층(85세 이상) 순으로 많음
- 고령화가 진행될수록, 의료 및 생활 보장이 더욱 요구되는 중기 및 후기고령층 비중이 증가
 - 전기고령층의 비율은 2041년 16.0%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에 15.8%로 감소할 전망. 중기 및 후기고령층은 꾸준히 증가하여 '50년에는 각각 전체 인구의 14.4%, 8.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(한국개발연구원, 2006)



출처: 한국개발연구원(2006), 「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」

[그림 3]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(2005~2050)

■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이 고령화의 주원인

- '10년 합계출산율은 1.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, 고령화 가속화의 주원인으로 작용
 - 우리나라 출산율: 2.83('80) → 1.6('90) → 1.47('00) → 1.08('05) → 1.22('10)

- 주요 국가 출산율(2009년도): 2.01(미국), 1.99(프랑스), 1.37(일본), 1.36(독일)

● '15~'50년도 예상 합계출산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남

〈표 4〉 국가별 합계출산율(1975~2050)

(단위: 명)

| | 1975 -80 | 1985 -90 | 1995 -00 | 2005 -10 | 2015 -20 | 2025 -30 | 2035 -40 | 2045 -5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프랑스 | 1.86 | 1.81 | 1.76 | 1.89 | 1.85 | 1.85 | 1.85 | 1.85 |
| 이탈리아 | 1.94 | 1.34 | 1.22 | 1.38 | 1.44 | 1.54 | 1.64 | 1.74 |
| 일본 | 1.83 | 1.66 | 1.37 | 1.27 | 1.30 | 1.40 | 1.50 | 1.60 |
| 한국 | 2.92 | 1.60 | 1.51 | 1.22 | 1.29 | 1.39 | 1.49 | 1.59 |
| 멕시코 | 5.25 | 3.63 | 2.67 | 2.21 | 1.89 | 1.85 | 1.85 | 1.85 |
| 스웨덴 | 1.66 | 1.91 | 1.56 | 1.87 | 1.85 | 1.85 | 1.85 | 1.85 |
| 영국 | 1.72 | 1.81 | 1.70 | 1.84 | 1.85 | 1.85 | 1.85 | 1.85 |
| 미국 | 1.79 | 1.92 | 1.99 | 2.09 | 1.95 | 1.85 | 1.85 | 1.85 |
| OECD 34개국 평균 | 2.26 | 1.91 | 1.68 | 1.69 | 1.71 | 1.73 | 1.77 | 1.80 |
| EU27 | 2.07 | 1.82 | 1.49 | 1.53 | 1.61 | 1.67 | 1.74 | 1.79 |

자료: United Nations, World Population Prospects- 2008 Revision

● 경제 성장, 의학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도 고령화에 기여

- 기대 수명: 65.7세(1980년) → 79.6세(2010년) → 81.5세(2020년)

〈표 5〉 기대 수명

(단위: 세)

| | 1980 | 1990 | 2000 | 2005 | 2010 | 2020 | 2030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계 | 65.7 | 71.3 | 76.0 | 78.6 | 79.6 | 81.5 | 83.1 |
| 남 자(A) | 61.8 | 67.3 | 72.3 | 75.1 | 76.2 | 78.0 | 79.8 |
| 여 자(B) | 70.0 | 75.5 | 79.6 | 81.9 | 82.9 | 84.7 | 86.3 |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2006

Ⅱ. 인구 고령화 시대의 부문별 이슈

1. 인구 고령화와 거시 경제

■ 노동력 규모의 감소

- 전체 노동력 규모는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
 - 전 연령대 경제활동인구가 2010년 약 2,582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 2,66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. 이후,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,4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

〈표 6〉 미래 노동력 전망 결과

(단위: 천 명, %, %p)

| 구분 | 2010년 | 2020년 | 2030년 | 기간 중 증감 (연평균 증감률) | | | 각 그룹별 비중 변화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'10~'20 | '20~'30 | '10~'30 | '10~'20 | '20~'30 | '10~'30 |
| 24세 이하 | 1,742 <6.8> | 1,528 <5.7> | 1,017 <4.1> | -215 (-1.3) | -511 (-4.0) | -726 (-5.2) | -1.0 | -1.6 | -2.6 |
| 25~49세 | 15,870 <61.5> | 14,253 <53.6> | 11,982 <48.8> | -1,617 (-1.1) | -2,271 (-1.7) | -3,888 (-2.8) | -7.9 | -4.8 | -12.7 |
| 50세 이상 | 8,209 <31.8> | 10,815 <40.7> | 11,578 <47.1> | 2,606 (2.8) | 763 (0.7) | 3,369 (3.5) | 8.9 | 6.4 | 15.3 |
| 합계 | 25,821 <100> | 25,596 <100> | 24,577 <100> | 774 (0.3) | -2,019 (-0.8) | -1,245 (-0.5) | 0.0 | 0.0 | 0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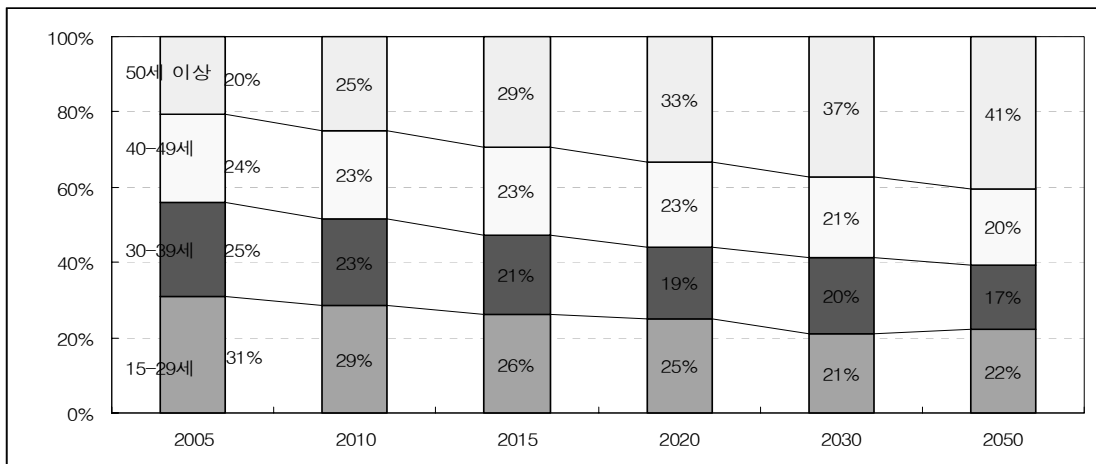
주: () 안은 연평균 증감률, < >는 총 경제활동인구 대비 각 그룹의 비중

자료: 삼성경제연구소(2011), 「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'3S' 현상 진단」

-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(3,619만 명)으로 감소할 전망
-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생산가능(25~49세) 인구는 2007년을 정점(2,066만 명)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

▣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

-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25%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20년이 되면 33%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
 -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('30년 이후)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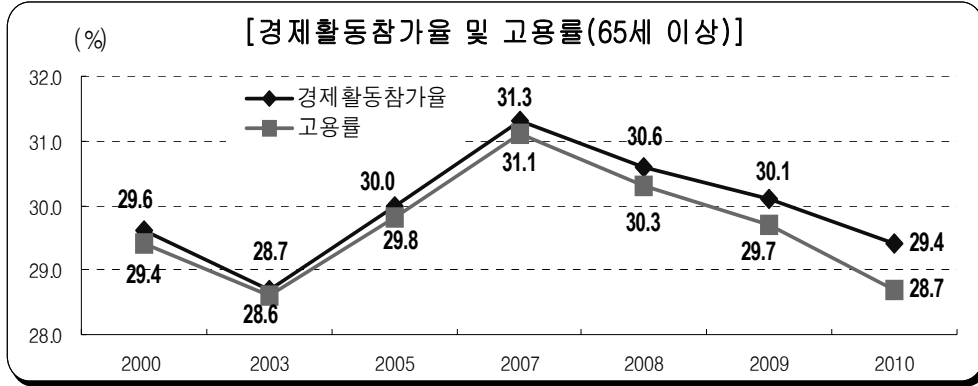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2005

[그림 4]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 전망

- ▣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높은 참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- 은퇴 이후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.4%, 고용률은 28.7%
 - '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, '03년에 28.7%로 가장 낮았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'08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



출처: 통계청, 「2011 고령자통계」

[그림 5]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

-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, 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(36.2%) 다음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음(2010년도 기준)

<표 7> OECD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

(단위: %)

| | 한 국 | 미 국 | 독 일 | 네덜란드 | 아이슬란드 | 스웨덴 | 일 본 | 영 국 | OECD 평균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
| 2001 | 29.6 | 12.9 | 2.7 | 3.2 | 19.7 | 10.3 | 22.6 | 5.3 | 11.0 |
| 2005 | 30.0 | 15.1 | 3.4 | 4.1 | 17.4 | 10.1 | 19.8 | 6.4 | 11.3 |
| 2010 | 29.4 | 17.4 | 4.0 | 5.9 | 36.2 | 12.1 | 21.8 | 8.6 | 12.8 |

자료: OECD, Dataset: LFS by sex and age- indicators

-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은퇴 연령에 가까울수록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고용률 유지
- 노인 빈곤률이 높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높은 근로의욕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55~79세 고령자의 58.5%(약 581만 명)가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, 그 중 54.9%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(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고령층)」, 2011)

▣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둔화 ⇒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

- 노동의 실질 GDP 성장기여도를 바탕으로 각 기간의 노동력 변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변화 추정
 -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~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~ 2010년 성장률(4.1%)에 비해 0.4%p 하락할 것으로 예상
 -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력이 0.7% 감소하면서 2019~2030년 잠재성장률은 2000~2010년 성장률(4.1%)에 비해 1.1%p 하락할 것으로 예상

〈표 8〉 노동력 규모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(2010~2030년)

(단위: %, %p)

| 구분 | 총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|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 (2000~2010년 기간 대비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00~2010년(A) | 1.12 | - |
| 2011~2018년(B) | 0.41 | -0.43 |
| 2019~2030년(C) | -0.68 | -1.08 |

주: 1)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(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성장률 하락폭은 더욱 확대)

2)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는 2000~2010년 기간과 비교한 차이

자료: 삼성경제연구소(2011), 「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'3S' 현상 진단」

2. 인구 고령화와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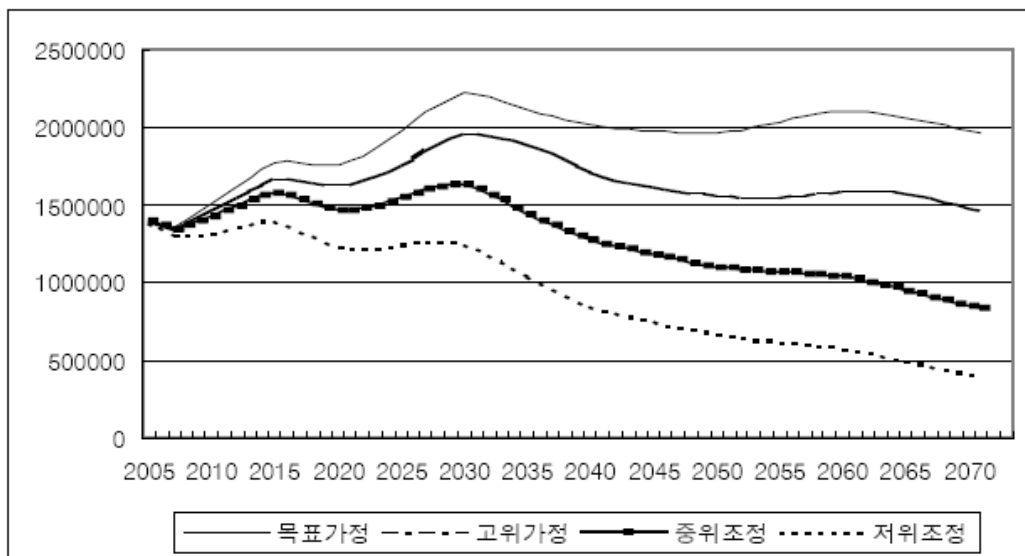
▣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규교육 부문의 수요 감소

- 영유아 교육 부문의 경우, 교육수요율이 당분간 증가하다가 203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(한국개발연구원, 2006)
 - 0~5세 인구가 감소하지만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 비율(교육수요율)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약 20년간은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*
- * 이러한 전망은 OECD 상위국가 수준이 되는 2010년까지 수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, 2015년 이후에는 육아휴직제나 무상유아교육·보육제도 등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한 것. 2030년이 되면 안정적인 수요율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

- 보육교육 시설 공급에 있어서, 3~5세 유아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나, 0~2세 영아의 경우에는 '35년 기준으로 40만 명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(중위조정 기준, 한국개발연구원, 2006)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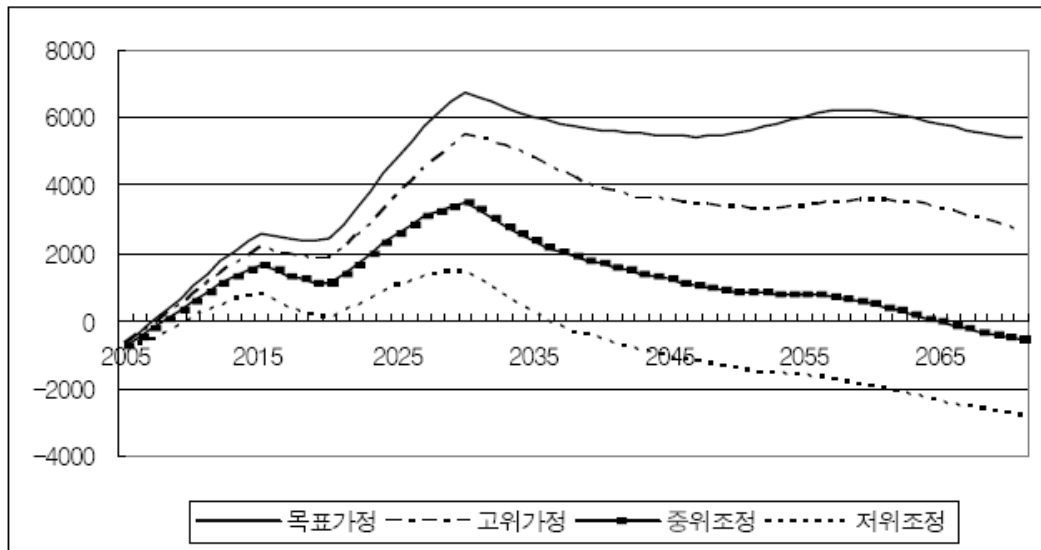
* 현재 시설의 활용도 85%, 기관 당 정원 60명 기준으로 추계

- 필요한 영유아 교육·보육 교사 수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2030년경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



출처: 한국개발연구원(2006), 「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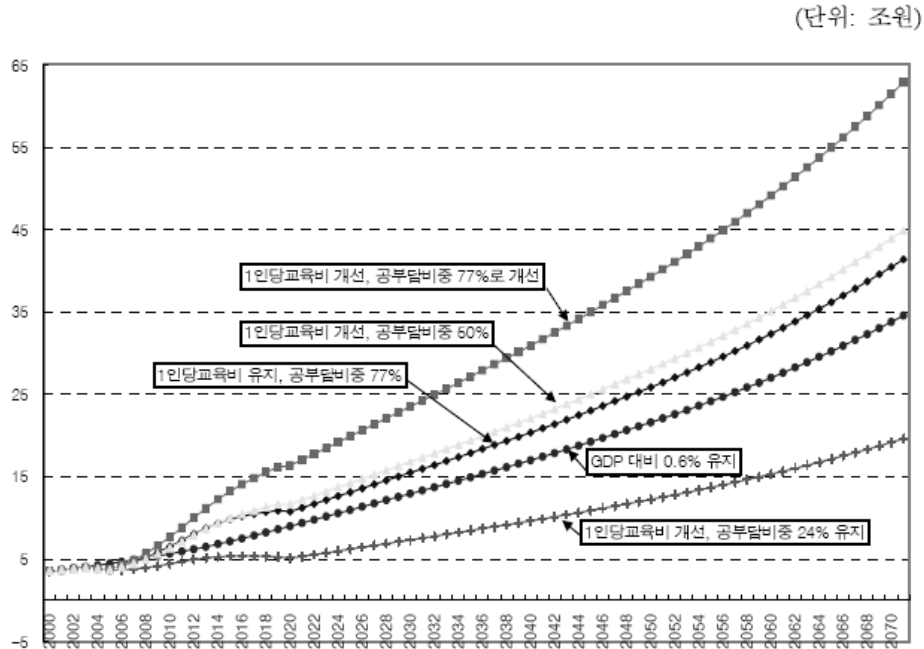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0~5세 보육 및 교육 수요 변화 추정



출처: 한국개발연구원(2006), 「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」

[그림 7] 0~2세 영아 추가 보육시설 규모

- 초중등교육 부문 역시 교사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
 - 교원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단,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교사의 공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학생 수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.
 - 고등교육 부문 또한 교원 수 및 공부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(한국개발연구원, 2006)
 -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가 향후 10년간 25~40% 상승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은 2010년까지는 10~14%, 그 이후 2020년까지는 5~8%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*
- * 고등교육 부문에서 공부담의 비중이 낮은 현재의 상황과 추후에 이 비중이 50~77%로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



출처: 한국개발연구원(2006), 「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」

[그림 8] 정부부담 고등교육비 수요 추정

▣ 평생학습 참여율은 현재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
-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요구되고, 따라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
- 그러나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다면, 훈련 참여에 적극적인 연령대(남성의 경우 37~47세, 여성의 경우 23~33세)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, 소극적인 연령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이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시사

3.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의료·주거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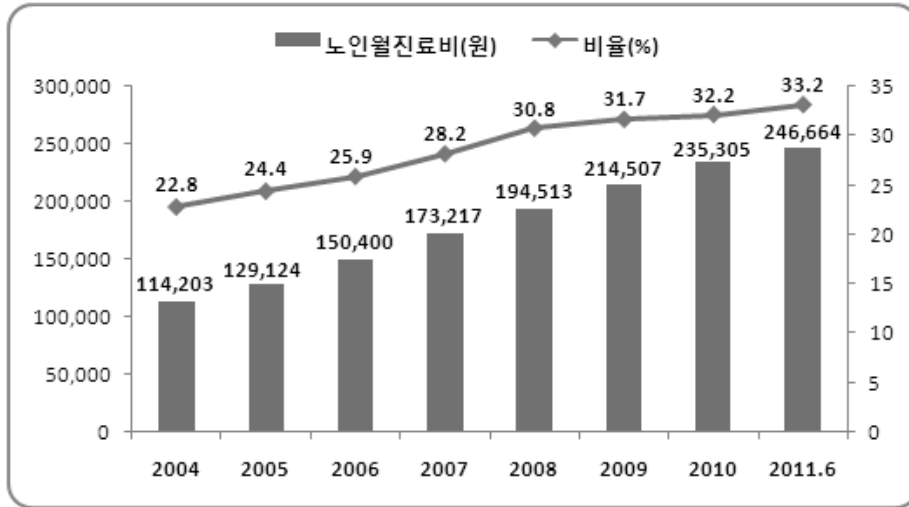
▣ 노인의료비의 증가

-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구성도 중고령층 중심으로 변화
 -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
 - 노인 질병의 경우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연령집단에 비해 병원 이용 기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
- 건강보험 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구성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 ⇒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 ⇒ 건강보험 재정 악화
 - 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0.3%를 차지
 - 노인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4조 583억 원으로 2004년도 대비 174% 증가
 - 2011년 상반기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46,664원으로, 2004년 114,203원 대비 2.1배 이상 증가

〈표 9〉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관련 주요 통계

| 구 분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.6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적용인구(천명) | 47,372 | 47,392 | 47,410 | 47,820 | 48,160 | 48,614 | 48,907 | 49,127 |
| 노인인구(천명) | 3,748 | 3,919 | 4,073 | 4,387 | 4,600 | 4,826 | 4,979 | 5,062 |
| 비율 (%) | 7.9 | 8.3 | 8.6 | 9.2 | 9.6 | 9.9 | 10.2 | 10.3 |
| 총진료비(억원) | 225,060 | 248,615 | 284,103 | 323,892 | 348,690 | 393,390 | 436,281 | 225,352 |
| 노인진료비(억원) | 51,364 | 60,731 | 73,504 | 91,189 | 107,371 | 124,236 | 140,583 | 74,922 |
| 비율 (%) | 22.8 | 24.4 | 25.9 | 28.2 | 30.8 | 31.7 | 32.2 | 33.2 |
| 노인월진료비(원) | 114,203 | 129,124 | 150,400 | 173,217 | 194,513 | 214,507 | 235,305 | 246,664 |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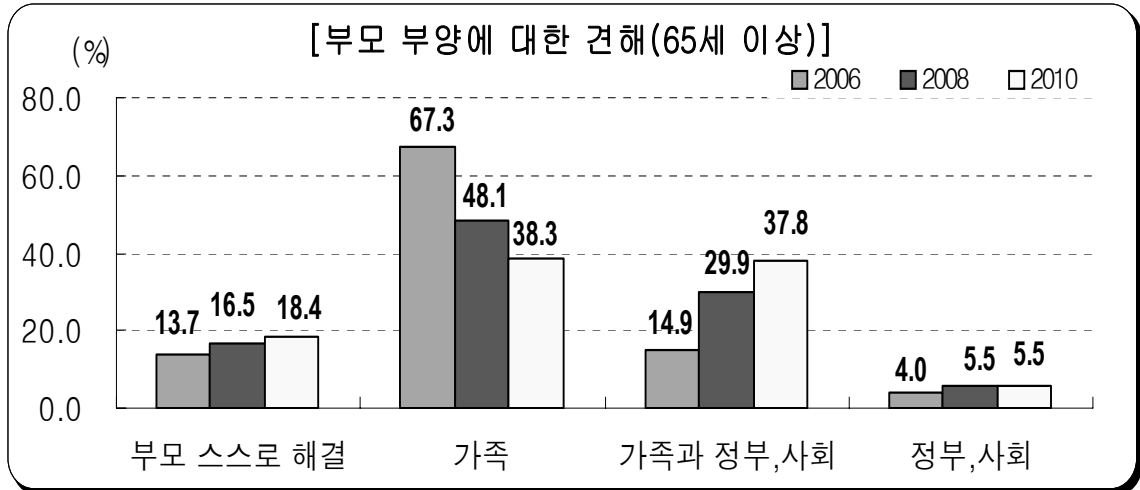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1

[그림 9]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율 및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

▣ 노인의 건강 보장 및 부양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부담 증가

- 노인의 건강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양가족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동시에 독거 노인 및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인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
-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는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⇒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
- 또한 노인 부부 및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, 향후 자녀와의 비동거 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부양 문제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
- * 향후 자녀와의 동거 여부 조사 결과, 2009년의 경우 60.6%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(통계청, 「사회조사」 2009)
-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, 가족 정부·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거나,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.
- ⇒ “재생산 노동의 사회화”(한국개발연구원, 2006)가 필요한 동시에 부양 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



출처: 통계청, 「2011 고령자통계」

[그림 10]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

■ 노인 단독 및 부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● 전체 가구 수 증가 예상

-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, 주되게는 50대 이상의 장년, 노인 가구의 증가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

●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, 고령가구(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)의 비중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고령 가구 비율: 11.9%('00) → 17.4%('10) → 22.3%('20) → 32.3%('30)
-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, 2010년에는 약 102만 1천 가구로 총 가구 구성비의 6.0%를 차지. 2020년에는 151만 2천 가구(8.0%), 2030년에는 233만 8천 가구(11.8%)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〈표 10〉 노인 가구 추이

(단위: 가구, %)

| | 총가구 | 고령가구 (65세 이상 노인 가구) | 구성비 | 독거노인 가구 (65세 이상 1인 가구) | 구성비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| |
| 2000 | 14,507,010 | 1,733,525 | 11.9 | 543,522 | 3.7 |
| 2005 | 15,971,010 | 2,432,247 | 15.2 | 776,996 | 4.9 |
| 2010 | 17,152,277 | 2,982,240 | 17.4 | 1,021,008 | 6.0 |
| 2015 | 18,191,663 | 3,533,961 | 19.4 | 1,250,792 | 6.9 |
| 2020 | 19,011,815 | 4,231,578 | 22.3 | 1,512,082 | 8.0 |
| 2025 | 19,593,767 | 5,338,955 | 27.2 | 1,894,260 | 9.7 |
| 2030 | 19,871,144 | 6,410,665 | 32.3 | 2,338,354 | 11.8 |

자료: 통계청, 「2010 고령자통계」

- 노인 중 노인복지생활시설 생활자*는 전체 노인의 1.5%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집에서 머물고 있음. 현재로서는 시설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시설 선호도 역시 낮은 편.(2009년 기준, 통계청 「한국의 사회지표 2010」)

*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)과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의 현원 수를 합산

-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시설 선호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. 자녀와의 비동거를 희망하는 응답자 60.6%중 75.7%가 본인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양로원 및 요양원 거주 희망자는 24.3%로 조사(통계청, 「사회조사 2009」)

4. 인구 고령화와 재정과 연금

▣ 연금, 공적 의료, 노인 복지 등, 공공지출 대폭 증가

- 2050년의 GDP 대비 총공공지출규모는 43%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(한국개발연구원, 2006)*

* 인구구조와 직결되지 않은 항목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

- 인구구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들에 대한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을 현재와 비교하면 2050년도의 경우 12~13%p 증가할 것으로 예상(현행 제도 기준)

■ 국민연금의 경우,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, 세대 간/내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

-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은 “저부담-고급여”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재정 적자에 이미 직면했거나 직면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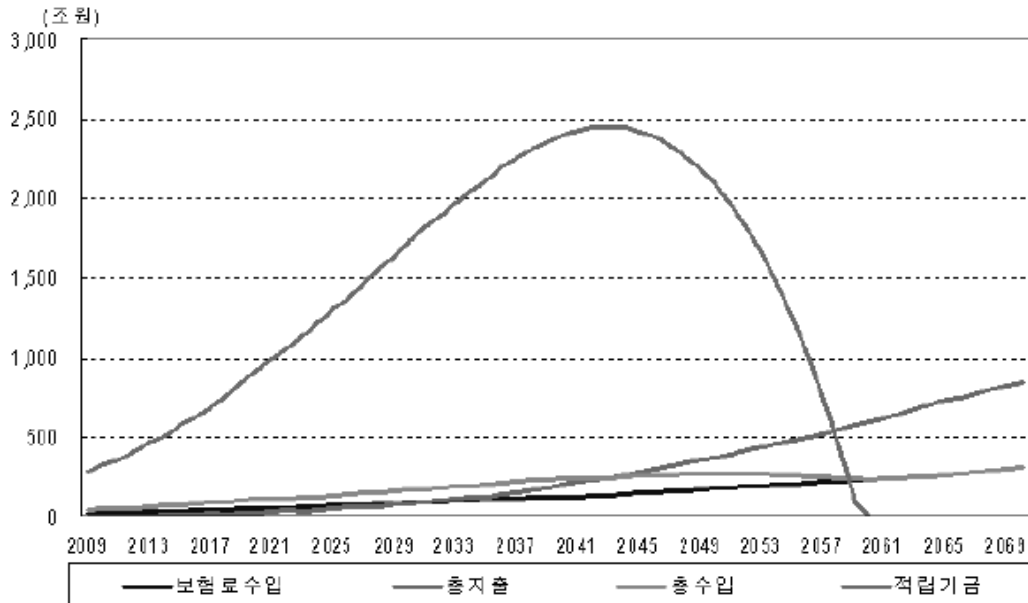
〈표 11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전망

| | 국민연금 | 특수직역연금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공무원연금 | 사학연금 | 군인연금 |
| 수지적자 연도 | 2044 (수지차: -5.4조) | 수지적자(1993) 정부 보전금으로 총당 (정부보전금: 2010년 1.7조, 2030년 16.2조 예상) | 2021 (수지차: -25억) | 수지적자(1973) 정부 보전금으로 총당 (정부보전금: 2010년 1.3조, 2030년 3.2조 예상) |
| 기금소진 연도 | 2060 (적립기금: -214.2조) | | 2033 (적립기금: 0원) | |

자료: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(2008),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(2010), 보건복지포럼(2010)

출처: 류건식(2011), 「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」

-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* 2060년에 기금 소진이 예상(윤석명 외, 2011)
 - *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예 따라 보험료는 9% 유지,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%로 하향 조정할 경우
 - 앞으로 20~30년간은 제도의 성숙화 과정으로,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
 - 그러나 저부담-고급여 속성을 내포한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45년경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 수지 적자가 발생.
 - 적립 기금은 2045년경에 정점에 달한 후 급속히 하락하여 2060년경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
 - 보험료 조정이 지체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를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



출처: 윤석명 외(2011), 「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」

[그림 11] 국민연금 재정 전망

- 국민연금제도는 또한, 취약계층은 오히려 재분배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 내포
 - 소득계층 간 재분배 효과 혜택이 국민 전체 중 최하소득 집단이 아닌, 국민연금 ‘가입자’ 중 최하소득 집단에 귀속
 - * 비정규직의 경우, 201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(직장가입)이 39.5%임(KOSIS)을 감안할 때, 근로 기간에는 노동시장에서, 향후에는 국민연금 혜택에서 이중 차별을 받게 됨
- ▣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,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⇒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
-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.1%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, 노인 빈곤율은 45.1%로 OECD 30개국 중 최고 수준

〈표 12〉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 빈곤율 국제 비교

(단위: %)

| 구분 | |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| 노인 빈곤율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공적연금 지배형 | 그리스 | 95.7 | 22.7 |
| | 룩셈부르크 | 87.4 | 3.1 |
| | 스페인 | 81.2 | 22.8 |
| | 오스트리아 | 76.6 | 7.5 |
| | 터키 | 64.5 | 15.1 |
| | 이탈리아 | 64.5 | 12.8 |
| 공적연금 우위형 | 핀란드 | 57.8 | 12.7 |
| | 포르투갈 | 53.9 | 16.6 |
| | 체코 | 50.2 | 2.3 |
| | 프랑스 | 49.1 | 8.8 |
| | 노르웨이 | 46.1 | 9.1 |
| | 헝가리 | 44.4 | 4.6 |
| | 한국 | 42.1 | 45.1 |
| | 벨기에 | 42.0 | 12.8 |
| 사적연금 우위형 | 독일 | 42.0 | 8.4 |
| | 미국 | 39.4 | 22.4 |
| | 캐나다 | 38.9 | 5.9 |
| | 뉴질랜드 | 38.7 | 1.5 |
| | 일본 | 34.5 | 22.0 |
| | 스위스 | 34.5 | 17.6 |
| | 영국 | 31.9 | 10.3 |
| | 스웨덴 | 31.1 | 6.2 |
| | 네덜란드 | 29.2 | 2.1 |
| | 아일랜드 | 29.0 | 30.6 |
| | 덴마크 | 28.9 | 10.0 |
| | 폴란드 | 28.7 | 4.8 |
| | 슬로바키아 | 26.0 | 5.9 |
| 사적연금 지배형 | 아이슬란드 | 15.0 | 5.0 |
| | 호주 | 11.8 | 26.9 |
| | 멕시코 | 5.0 | 28.0 |
| OECD 평균 | | 42.1 | 13.5 |

주: “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표준 소득자, 노인 빈곤율은 표준 가구의 가처분 소득 50%를 하회하는 소득을 지닌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의미”

출처: 류건식(2011), 「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」

-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나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0%는 가입 기간 40년을 가정할 때의 수치인데,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.8~30.7%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(김대환, 2011)
 - 국민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

5.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

■ “노인”에 대한 인식 변화

- 『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0)』 조사 결과, 노인을 지칭하는 연령에 있어서 응답자의 45.5%가 70세 이상부터, 41.5%가 65세 이상부터라고 응답.
 - 연령별로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. 연령이 높을수록 70세 이상을 노인이 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아짐
 - * 참고로 법령에서 정하는 “고령자” 또는 “노인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.
 - 고령자고용촉진법: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
 - 노인복지법: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
 - 국민연금법: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

〈표 13〉 ‘노인’을 지칭하는 연령에 대한 연령별 인식

| | 55세 이상 | 60세 이상 | 65세 이상 | 70세 이상 | N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10대 | 1.4% | 21.7% | 37.1% | 39.9% | 143 |
| 20대 | .7% | 16.1% | 39.5% | 43.7% | 286 |
| 30대 | 1.1% | 10.9% | 45.1% | 42.8% | 348 |
| 40대 | .6% | 11.0% | 43.1% | 45.3% | 362 |
| 50대 | .0% | 7.4% | 42.0% | 50.6% | 269 |
| 60대 | .0% | 10.9% | 33.7% | 55.4% | 92 |

<표 계속>

| | 55세 이상 | 60세 이상 | 65세 이상 | 70세 이상 | N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전체 | .7% | 12.3% | 41.5% | 45.5% | 1500 |
| 사례수 | 10 | 185 | 623 | 682 | 1500 |
| 유의도 | $\chi^2 = 33.575^{***}$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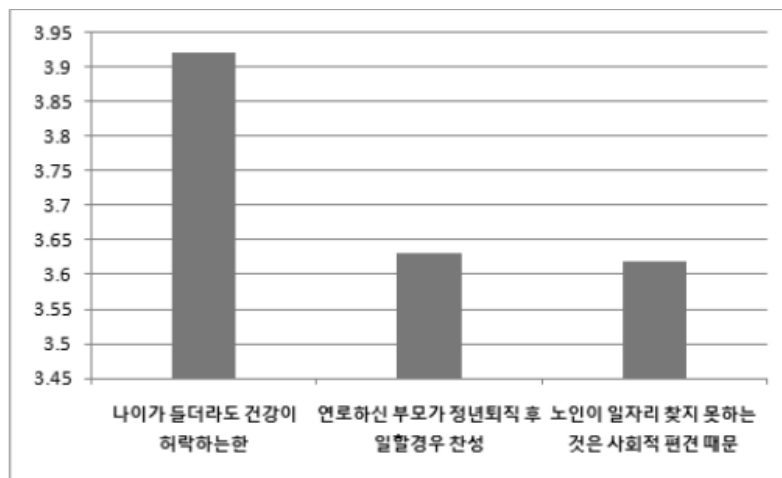
주: 응답자는 전국 만 15-64세 남녀 1,500명

출처: 임언·박천수·최지희(2010),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0)」

- 평균 수명의 연장, 노인인구 내에서의 고령화 진행,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 증가로 인해 노인 기준 연령을 포함한,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

■ 경제활동 지속 의지가 높고, 고령 부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

- “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 할 생각이다”에 대한 동의 정도가 3.92로,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연로한 부모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할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(3.63)과 노인의 구직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(3.62) 역시 높게 나타난 편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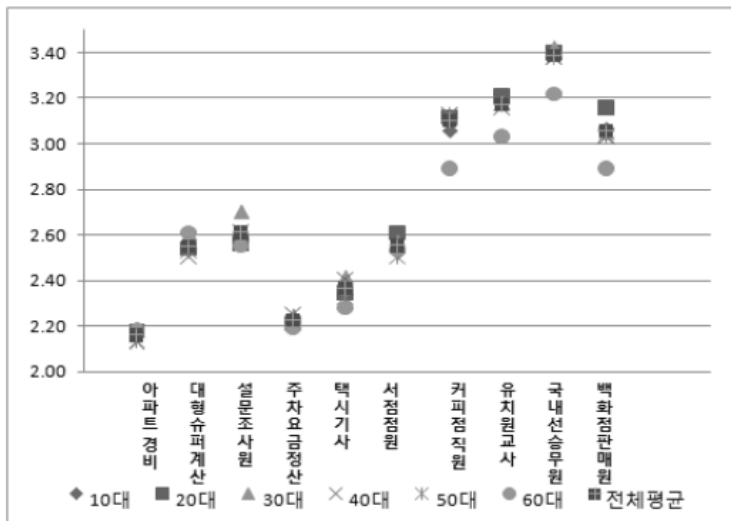
주: 1) 1= “매우 반대”, 5= “매우 동의”로 측정

2) 응답자는 전국 만 15-64세 남녀 1,500명

출처: 임언·박천수·최지희(2010),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0)」

[그림 12]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

- 한편, 고령자의 단순노무직 종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부감이 없으나 전문직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
-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전대, 향후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직종별 암묵적 연령 제한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임



주: 1) 각 직업에 대한 고령자의 직업수행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으로, 1= 전혀 상관없음, 5= 매우 불편함으로 측정.

2) 응답자는 전국 만 15-64세 남녀 1,500명

출처: 임언·박천수·최지희(2010),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0)」

[그림 13] 고령자의 직업 수행에 대한 불편함 정도

■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무 및 조직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

- 한편, 고령 근로자의 조직문화 및 직무 인식 조사 결과,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소속 조직의 인재 우대, 의사소통 및 신뢰성에 대하여 타 연령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박주완, 2011)
- 또한 직무 만족도와 조직만족도가 높고, 특히 이직 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Ⅲ. 시사점 및 정책 과제

▣ 경제활동 참가율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- 출산율 하락 방지와 더불어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, 인적·물적 자본 축적의 장애요인 제거,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- 특히, 핵심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
-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실화, 효율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

▣ 고령자 대상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로의욕 제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

-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또한 노인 빈곤률이 높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높은 참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- 선진국의 고령자 노동정책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동시에, 취업 인구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역시 시급

▣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부문의 경우,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

- 특히,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영아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

▣ 초·중등교육 부문의 경우,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사 수급 계획 조정, 학교 통폐합, 학교 유희시설 활용 방안 등의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

- 단, 추가적 재정 투입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원 공급을 급격히 제한하기보다 학생 수의 변화, 학생 수의 지역별 편차에 따라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.
- 또한 이러한 교수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화 수업 등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(김영화, 2009)

- 대학교육 적령 인구를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인들의 대학 진학 및 재진학이 용이하도록 입학제도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대학의 기능을 학위 수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성인 대상 직무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더욱 무게를 실는 것이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보다 적합할 것

■ 평생학습기관의 직업재교육 기능 강화

-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소극적인 연령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평생학습기관의 기능을 자격 부여에 국한시키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함
- 공급기반 확충 필요. 이를 위해 민간 및 대학의 평생학습 참여 강화,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특히 유휴 여성인력과 노인인력 대상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시급

■ 여성의 출산 장려 및 경제활동 제고, 가정 내 부양서비스를 위해 가족 구성원간, 가족과 사회 간의 역할 재분담 필요

- 저출산·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는 한편, 여성의 출산 장려 또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
- 또한 가정 내에서 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, 가정

해제, 노인 단독 및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정 내, 가정-사회 간의 역할 재분담이 필요한 상황

- 따라서 가족정책의 핵심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가정 내에서 아동과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상생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음
 - 이를 위해서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, 또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, 즉, “남성의 가족화”, “여성의 시장화”, “재생산 노동의 사회화”(한국개발연구원, 2006)가 필요
 -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나 유연근로제 도입이 필요
 - 또한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,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간 호휴가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특히 실버서비스 산업 및 보건,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육성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인 부양에 대한 가정과 사회 간 역할 분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, 단, 질 낮은 서비스업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

■ 저부담-고급여 구조의 연금 재구조화가 시급

- 국민연금은 향후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구조화가 시급
 -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,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. 이를 위해 세대 간 회계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
- 노후소득보장 및 고령자 복지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적절한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- 근본적으로는, 고령자의 건강 개선 및 질병 예방 등을 통한 질적 생활 향상을 통해 경제적·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
 - 정신적·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여가건강운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, 예방적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

▣ 새로운 인력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

- 노인의 기준 연령을 포함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
-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근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연령차별적이고 강제 조기퇴직제도에 기반한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들의 인사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임
- 소속 조직의 문화에 대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, 직무·조직몰입도와 충성도가 높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활용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
참고문헌

- 국민건강보험공단.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1.
- 김대환(2011). 「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」, 『KIRI WEEKLY』. 보험연구원.
- 김영화(2009). 「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미래 교육」, 『교육정책포럼 198호』. 한국교육개발원.
- 류건식(2011). 「OECD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」, 설명자료. 보험연구원.
- 박주완(2011). 「고령 근로자의 조직문화와 직무에 대한 인식」, 『THE HRD REVIEW』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삼성경제연구소(2011). 「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‘3S’ 현상 진단」, 『CEO Information』.
- 윤석명 외(2011). 『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』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- 임언·박천수·최지희(2010). 『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0)』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통계청. 「장래인구추계」 2006.
- _____. 「사회조사」 2009.
- _____. 「한국의 사회지표 2010」.
- _____. 「2010 고령자통계」.
- _____. 「2011 고령자통계」.
- _____.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고령층)」, 2011.
- _____. 「전국 인구 추계 피라미드」.
- 한국개발연구원(2006). 『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』.
- OECD. Dataset: LFS by sex and age - indicators(<http://stats.oecd.org/Index.aspx>).
- United Nations. World Population Prospects - 2008 Revision
-

〈부표 1〉 인구항목 2010-2020

| 인구구조/ 부양비별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인구(명) | 48,874,539 | 48,988,833 | 49,083,184 | 49,162,816 | 49,227,451 | 49,277,094 | 49,311,793 | 49,332,392 | 49,340,350 | 49,337,991 | 49,325,689 |
| 남자(명) | 24,540,316 | 24,592,456 | 24,632,725 | 24,665,686 | 24,689,966 | 24,706,848 | 24,714,979 | 24,715,520 | 24,709,222 | 24,697,237 | 24,679,762 |
| 여자(명) | 24,334,223 | 24,396,377 | 24,450,459 | 24,497,130 | 24,537,485 | 24,570,246 | 24,596,814 | 24,616,872 | 24,631,128 | 24,640,754 | 24,645,927 |
| 인구 성장률(%) | 0.26 | 0.23 | 0.19 | 0.16 | 0.13 | 0.1 | 0.07 | 0.04 | 0.02 | 0 | -0.02 |
| 0-14세 (명) | 7,906,908 | 7,643,414 | 7,395,963 | 7,167,795 | 6,953,813 | 6,732,801 | 6,536,383 | 6,394,970 | 6,286,178 | 6,189,630 | 6,118,161 |
| 15-64세 (명) | 35,610,778 | 35,808,347 | 35,945,477 | 36,032,796 | 36,095,171 | 36,163,474 | 36,190,045 | 36,119,155 | 35,979,409 | 35,784,768 | 35,506,403 |
| 65세 이상 (명) | 5,356,853 | 5,537,072 | 5,741,744 | 5,962,225 | 6,178,467 | 6,380,819 | 6,585,365 | 6,818,267 | 7,074,763 | 7,363,593 | 7,701,125 |
| 인구구성비 0-14세 (%) | 16.2 | 15.6 | 15.1 | 14.6 | 14.1 | 13.7 | 13.3 | 13 | 12.7 | 12.5 | 12.4 |
| 인구구성비 15-64세 (%) | 72.9 | 73.1 | 73.2 | 73.3 | 73.3 | 73.4 | 73.4 | 73.2 | 72.9 | 72.5 | 72 |
|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(%) | 11 | 11.3 | 11.7 | 12.1 | 12.6 | 12.9 | 13.4 | 13.8 | 14.3 | 14.9 | 15.6 |
| 총부양비 | 37.2 | 36.8 | 36.5 | 36.4 | 36.4 | 36.3 | 36.3 | 36.6 | 37.1 | 37.9 | 38.9 |
| 유소년 부양비 | 22.2 | 21.3 | 20.6 | 19.9 | 19.3 | 18.6 | 18.1 | 17.7 | 17.5 | 17.3 | 17.2 |
| 노년부양비 | 15 | 15.5 | 16 | 16.5 | 17.1 | 17.6 | 18.2 | 18.9 | 19.7 | 20.6 | 21.7 |
| 노령화지수 | 67.7 | 72.4 | 77.6 | 83.2 | 88.9 | 94.8 | 100.7 | 106.6 | 112.5 | 119 | 125.9 |
| 중위 연령 (세) | 38 | 38.6 | 39.2 | 39.8 | 40.4 | 41 | 41.6 | 42.1 | 42.7 | 43.3 | 43.8 |
| 중위 연령 -남자 | 36.9 | 37.5 | 38.1 | 38.6 | 39.2 | 39.7 | 40.3 | 40.8 | 41.3 | 41.8 | 42.3 |
| 중위 연령 -여자 | 39 | 39.7 | 40.3 | 41 | 41.6 | 42.2 | 42.9 | 43.5 | 44.1 | 44.7 | 45.3 |
| 평균 연령 (세) | 38 | 38.5 | 39 | 39.4 | 39.9 | 40.4 | 40.9 | 41.3 | 41.8 | 42.2 | 42.7 |
| 평균 연령 -남자 | 36.8 | 37.3 | 37.8 | 38.2 | 38.7 | 39.2 | 39.6 | 40.1 | 40.5 | 41 | 41.4 |
| 평균 연령 -여자 | 39.2 | 39.7 | 40.2 | 40.7 | 41.1 | 41.6 | 42.1 | 42.6 | 43 | 43.5 | 43.9 |

자료: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